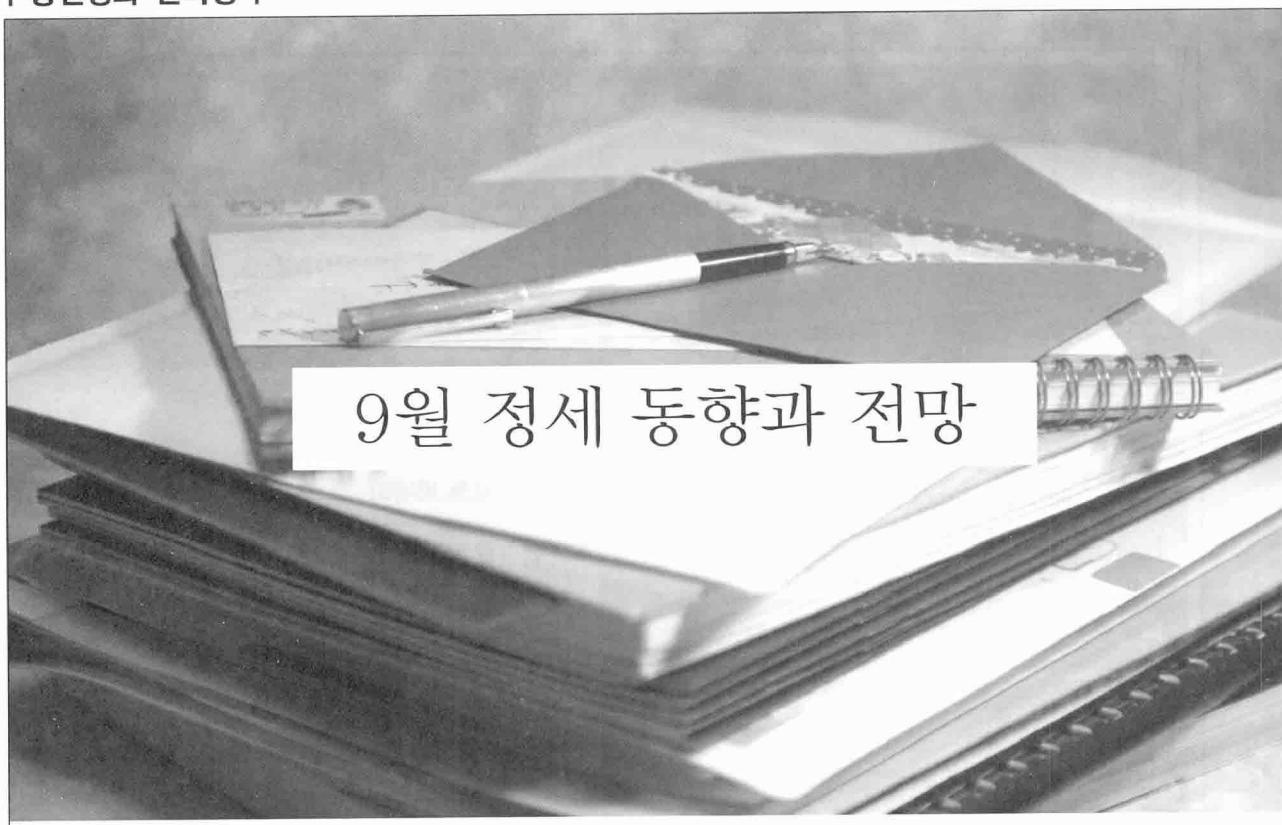

9월 정세 동향과 전망

✲장태평 농식품부 수장 취임으로 2기 닻 올라

– 8월 7일 취임한 2기 농식품부 장관은 2004년 초 구조정책국장을 역임한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맡게 됐다. 야당의 인사청문회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18대 국회 원구성이 합의된 이후 9월 초 인사검증을 받게 된다.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, 한미FTA 피해 대책, 생산비 관련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– 장 장관이 밝힌 미래비전은 돈버는 농어업의 기조를 유지한다. 정 정관은 최근 농식품 수출업체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. 또한 ▲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▲시장교섭력을 갖춘 수출주체 육성 ▲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수출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.

– 최근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급등한 비료, 사료, 면세유 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가 크게 급증한 만큼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과 농민단체와의 의사소통 구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.

✲반쪽짜리 가축법 개정안 통과

– 여야는 지난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, 80여일간 파행을 거듭한 국회가 정상화했다. 그러나 개정된 가축법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잇다.

– 가축법 개정안에는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,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 또한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,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.

–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은 현재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쇠고기는 미국산 밖에 없어 미국산 쇠고기를 예외로 한 개정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.야당 또한 개정안에 대해 한발 물러섬으로써 결국 반쪽자리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지적이다.

✲한미FTA 국회비준 9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

– 한 · 미FTA 비준을 놓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국 대선전 이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9월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. 여기에 더해 한 ·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FTA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 EU, 멕시코, 중국 등과의 FTA협상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어 농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.

– 한편 박진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은 미국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며, 엇갈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.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이 먼저 FTA를 처리해 미국측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.

–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 농업계는 한미FTA가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고,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고, 국회비준 통과시점에 맞춰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.